

고용 트로이카, 제조·건설·서비스 ‘날개없는 추락’

제조업

車-조선업 구조조정 여파

건설

투기 규제 주력 물량 축소

서비스

최저임금 영향 11개월째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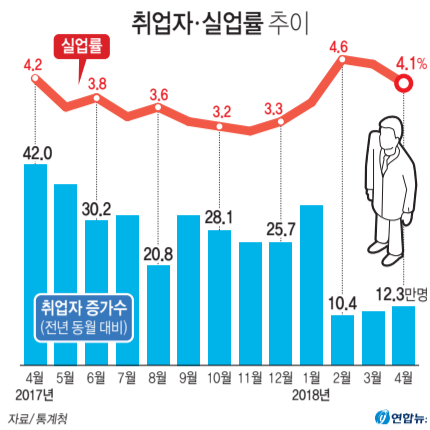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대에 머무르자 그 원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선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되던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무엇보다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 등 서비스업 종사자 감소와 건설업 부진이 겹치며 고용 부진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고용 상황이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령층 증가 둔화와 관계 있는 만큼 고용 부진 상황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6만8000명 줄어 11개월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여파가 남은 데다 제조업 생산지표가 2~3월에 좋지 않아 후행성이 있는 고용지표에 악영향을 줬다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의료정밀기기와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이 남은 가운데 자동차 산업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제조업 생산지표 악화가 조선업에 영향을 미쳐 취업자수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10만 명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 취업정보게시판. /연합뉴스

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과 건설업 부진도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에 한 몫했다.

지난 달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수는 2만8000명 줄며 11개월째 감소했고 건설업은 작년 월평균 증가 수인 11만9000명에 훨씬 못미치는 3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부진을 면치 못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감소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데다가, 시장이 포화상태라 조정 국면인 측면도 있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조업은 구조조정, 산업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주력 산업부진 지속 등으로 4월 들어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했고 건설업은 주택 준공물량 축소 등의 영향으로 고용 증가 폭이 둔화했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제조업 생산지표는 물론, 수출까지 부진해 경기가 꺾였다고 진단하면서 정부의 연간 고용목표치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영향에 주력산업인 제조업

위기가 지속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부진한 것”이라며 “수출도 반도체 빼고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같은 고용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증가 속도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달 40만명 이상 증가하던 15세 이상 인구는 2016~2017년 매달 30만명 대로 감소했고 올해는 1~4월 연속 20만명대로 떨어졌다.

일자리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취업자 증가폭도 함께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1분기 취업자 증가폭 둔화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고령화와 최저임금 인상 효과, 수출이나 투자 등 제조업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조적, 정책적, 경기적 효과가 모두 작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제6차 일자리위원회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 및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초동만 근무하는 ‘귀족검사’ 사라진다

검사장 전용차량 제공도 중단
공정한 기회 제공·지방청 활성화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근무하는 ‘귀족검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도 중단된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평검사의 서울과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총 3~4회로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 ‘경향(京鄕) 교류 원칙’을 강화해, 공정한 기회 제공 확대와 지방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대검찰청 전출 검사 가운데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은 일부 평검사가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무부 등을 돌며 서울 근처에만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됐다. 전문 분야를 피해자보호·경제·성범죄·증권 등 47개로 구분하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한다.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전문연구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을 둔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전국 11곳에 지정된 분야별 중점검찰청에 근무하면, 필요 시 근무 기간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도 줄인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의 필요성과 중대성 등 파견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포함한 22개 국내 기관에 검사 4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그간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은 중단된다. 법무부는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검사장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해왔다. 대신, 명

제외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6월과 12월에 하는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해당 검사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사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와 파견,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의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글·사진 이범중 기자 joker@

악성 잡초로 오염되고 있는 우리 농경지

농촌진흥청 ‘잡초 정밀 분포 조사’

갈수록 우리 농경지가 악성 잡초에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 잡초와 제초제에 강한 내성을 보이는 제초제 저항성 잡초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경지 발생 잡초 정밀 분포 조사(2013년~201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논·밭·과수원 등에서 확인한 잡초는 총 619종이었다.

이 중 외래 잡초는 166종(약 27%)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사한 결과보다 66종 늘었다.

농진청은 외래 잡초의 증가 원인으로 재배 작물과 재배법의 다양화, 부족한 제초 인력, 기후변화 등을 꼽았다.

문제는 국내에는 외래 잡초의 식물학적 특성이나 방제 정보가 거의 없고 외국의 정보도 국내 상황에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제초제 저항성 잡초의 오염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제초제 저항성 잡초로 알려진 14종의 지난해 발생 면적은 48만8000ha로, 5년 전 17만7000ha보다 2.8배 늘었다. 이 중 물달개비·논피(강피)·올챙이고랭이·미국외풀이 전체의 90%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의 논에서 2종~3종의 잡초가 동시에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잡초에 의한 농경지 오염이 심각하자 농진청은 외래 잡초와 제초제 저항성 잡초 방제 정보를 담은 안내 책자를 제작하고 전국 농업기술센터와 농가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제4회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참가 접수를 6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콘테스트는 6월 11일부터 7월 18일 까지 접수를 받아 지역에선 및 본선을 거쳐 올 10월 중 결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행방식은 지역예선을 거쳐 45개팀을 선발한 후 전국 본선을 실시하고, 상위 10

개팀이 최종결선 무대에 진출하는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선에 진출한 50개팀은 기술, 사업화, 발표 등으로 이루어진 분야별 전문가 멘토단으로부터 1:1 심화 멘토링 지원을 받게 된다.

최종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원이 수여되는 등 총 1억 7천만 원의 상금과 상

장이 수여되며, 결선 진출 10개팀에게는 기술사업화연구개발(R&D)자금과 현장 창업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창업한 지 5년 이내(2013년 1월 1일 이내)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로 식품 및 농산물, 농식품 ICT 접목 분야, 농산물 활용 바이오분야, 농기자재, 서비스, 6차산업 등 농식품분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결합시킨 아이템이라면 무엇이든지 응모가 가능하다.

/세종=최신용 기자